

「[성명] 고이케 도쿄도 지사의 추도사 송부 중지」에 항의하며 일본 정부에게 관동대지진 하의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히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성명문」(2018년 9월 1일)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때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발생하여 일본의 관민은 조선인과 중국인, 일본인을 학살했다. 이때, 일본 정부는 지방행정과 무전을 사용하여 「조선인이 방화를 했다」 등의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하였고 조선인을 향한 박해는 커지게 되었다. 또한, 군대와 경찰도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을 학살했는데 일본 정부는 희생자의 사체를 가지고 달아나는 등 사건을 은폐하였고, 95년이 지난 지금도 유족에 대한 사죄나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일본인에 의한 타민족 학살의 역사에는 일체의 언급 없이 그러한 희생자들을 「대지진 후에 다양한 사정으로 희생된 분들」이라는 표현을 2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학살의 사실을 숨기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추도 행사의 주최자는 고이케 도지사에게 서명과 함께 추도사 발표의 재고를 촉구했는데 이를 거부하는 장소에서 나온 발언이다. 왜 「추도사를 내지 않는 것」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인지, 가해의 사실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태도에는 가해자로서의 사죄도 반성도, 헤이트 크라임 재발 방지의 의지도 없다.

그러나 이는 고이케 도지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의한 질문주의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해 왔다.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중국인 학살에 일본 정부가 관여한 것」에 대해 조사한 한에서는 「정부 내에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으므로, 대답할 수 없다」(2016년). 따라서 「유감의 뜻을 표명」할 예정도 없다(2017년)라고.

이것이 95년간, 일본 정부가 내각회의에서 결정하여 답한 조선인, 중국인 학살에 대한 공식 견해이며 진상규명은 일본 사회 안에서 방치되고 있다.

조선인, 중국인 학살 사건은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외국인의 절도, 강도에 주의」라는 외국인, 재일 외국인에게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유언비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반복되어 퍼지고 있다. 작년과 올해는 조선계 단체, 기관을 방화하고 총격하는 등의 사건도 일어났다. 「조선인에 의한 폭동이 실제로 있었다」부터 조선인을 살해한 것은 「정당방위」라고 하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늘어놓은 언설도 대두하고 있다. 현재의 일본은 95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 헤이트 크라임을 일으키는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

오사카 북부 지진 때에 법무성 인권 옹호국이 「재해 발생 시에는 인터넷상에 차별이나 편견을 선동할 의도로 허위 정보가 투고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호소했으나(아사히신문 디지털 2018.6/19). 과거 학살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말에 무게는 없다.

우리들이 관동대지진의 때와 같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무고한 헤이트 스피치를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 또한 자치단체의 수장 등이 가해의 사실과 그 희생자 유족을 진지하게 대면하여 진상을 밝히고, 두 번 다시 비참한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해야 한다. 관동대지진으로부터 95년째를 맞이한 지금 우리들은 위정자가 과거의 과오에 눈을 감지 않고 진지하게 마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